어종·물길 고려 않은 탁상행정식 설계…불량 어도 양산

물길 끊긴 魚道
생태계도 끊겼다

〈3〉 설계부터 엉망…관리도 부실

설계과정 환경전문가 참여 안해
'불량 어도' 전남에만 112개
전문 인력 부재·지속 점검 미흡
'유명무실' 어도 개선 대책 시급

순천시 구강리에 있는 어도에 물이 흐르지 않고 입구와 출구가 수풀로 뒤덮여 있다(왼쪽).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어도는 물고기가 오르지 못할 만큼 30㎝ 이상 낙차가 있다.

물길인 어도가 제 기능을 못 하는 데는 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어도 설계에 반영되는 주변 환경 조사부터 부실한 데다, 미흡한 수시 점검 등이 맞물리면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도 점검 및 관리 체계에 대한 구체적 조항·사후 보강 의무 등도 명확하지 않고 개·보수를 위한 예산 지원도 원활하지 않다보니 농어촌공사와 지자체가 형식적으로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있으나마나한' 어도를 방치하는 수준으로 내버려 뒀다는 것이다.

◇부실 설계…전문 인력 부재=12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광주·전남 '불량' 어도 114곳을 평가하면서 ▲입구·출구 낙차 ▲경사도 ▲(어도) 내부·측벽 상태 ▲어도 형식 등을 기준으로 삼아 항목별로 점수(1~10점)을 부여한 뒤 총점 25점 이하는 '불량', 40점 이상은 '양호'로 분류하고 있다.

주변 하천 지형, 어종 생태, 유속·수위 등은 고려하지 않고 구조적 평가만으로 기능을 평가하다보니 현장과 맞지 않는 탁생행정식 어도 설계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불량' 어도가 전남지역에만 장성(20개)·해남(15개)·순천(14개)·강진(12개)·담양(11개)·화순(10개)·보성(7개)·구례(6개)·곡성(5개)·장흥·나주(이상 3개)·영광·함평(이상 1개) 등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점과 무관하지 않다.

생태학적 관심 자체가 낮았던 예전과 달리, 최근 어도의 필요성이 조명되기 시작했는데, 정작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내수면어업법이 지난 2013년 개정되면서 5년마다 '어도종합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마련됐고 국가어도정보시스템을 통한 어도 현황 조사·관리 체계도 갖춰졌지만 한계는 여전한 실정이다.

어도 제작 과정에서도 현재 국내에 표준화된 어도 구조물은 4가지(계단식·도벽식·아이스하버식·버티컬슬롯식)로 제한되면서 하천 지형과 환경, 수위, 유속 등이 다양한 한국의 하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대부분의 지적이다.

계단식 어도는 구조가 단순하고 시공이 간편하지만, 내부 흐름이 고르지 않고 순환류(소용돌이)가 생겨, 도약력과 유영력이 좋은 어종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도벽식 어도도 벽을 지그재그로 배치해 흐름을 유도하지만, 유속이 너무 빨라 수심 확보가 어렵고, 수심이 20cm 이상일 경우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 용수손실이 크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이런데도 설계 과정에서 어도를 통해 이동할 회귀성 어종의 종류와 생태, 하천 유형 등을 검토할 전문 인력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흡한 수시 점검, 어도 '있으나마나' 방치 = 어도 관리를 규정하는 '내수면어업법'이 지난 2005년 개정됐지만 당시에도 어도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댐에 대한 추가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보강하는 등의 조치가 반영되지 않았고 관리 주체도 구체적이지 않았는데, 현재도 비슷한 실정이라는 게 환경단체 등의 지적이다.

또 어도 관리 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넘어갔음에도, 예산 등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열악한 자치단체 여건상 형식적인 관리 업무를 떠안고 있는 구조다. 사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할 인력은 커녕, 전당 인력조차 없는 곳이 부지기수다.

농어촌공사도 명확한 관리 의무를 갖고 있음에도 "주요 업무는 농업 용수 공급이라,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는 어도 설치 및 관리 의무에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환경단체 등은 "어도를 단순한 구조물이 아닌 지역의 생태·관광 자원으로 인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글·사진=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이른 장마…광주·전남은?

오늘~14일 최고 80㎜ 비
19일부터 장마전선 북상

제주에서 12일 장맛비가 내린 가운데 광주·전남은 오는 19일 이후부터 장마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형성된 장마전선이 오는 19일 이후에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일주일 이른 12일 장마가 시작됐다. 제주 장맛비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에도 13~14일 이틀에 걸쳐 20~80㎜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남해안 지역에도 100㎜ 이상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광주·전남에 내리는 비는 장맛비로 볼 수 없다는 게 광주기상청 설명이다. 장마는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 형성된 장마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비를 뿌리는 현상. 기상청은 제주, 남부, 중부지역을 나눠 장마를 선언한다.

이번 비는 장마전선과 무관하다는 것이 기상청 분석이다.

13~14일에는 기압골과 북태평양고기압 사잇길로 필리핀 동쪽 해상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형성된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리는 것으로, 장마전선 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것. 15~16일에도 필리핀 부근 서쪽에 발생한 태풍 '우딥'의 영향으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돼 비가 뿌릴 전망이지만 장마전선의 영향은 아니라는 게 기상청 입장이다.

광주·전남 등 남부지방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6월 23일이며, 종료일은 7월 24일이다. 지난해 장마 기간 광주에 비가 내린 날은 23일이었다.

비가 내리면서 한낮 30도를 웃돌던 더위는 한 풀 꺾일 전망이다. 13일 낮 최고기온은 22~26도, 14일 낮 최고기온은 24~28도, 15일 낮 최고기온은 24~28도에 머물 전망이다.

기상청은 "14일 새벽부터 남해안 지역에는 시간당 10~3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다"며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양파 농가 눈물 닦자 전남도, 양파 3t 구매

전남도가 12일 양파값 폭락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 〈광주일보 6월 11일 6면〉 '도청 직원 양파 사주기 운동'을 펼쳤다.

양파값의 경우 생육 시기 기상 호조로 품질 좋은 양파 생산량이 늘면서 지난 11일 기준 도매가(15㎏ 상품·1만 534원)가 전년도(1만 8616원)에 견줘 37.90%하락했다.

전남도는 양파 생산농가의 어려움에 공감,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5㎏짜리 양파 600망(3t) 공동 구매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전남도의 건의로 ▲정부 수매 비축 3만t ▲저품위 출하 억제 4000t ▲중생종 출하 연기 5000t의 수급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전남도는 또 중앙부처와 혁신도시 내 16개 공공기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외식산업중앙회 등에 국산 양파 구매 확대 및 구내식당을 통해 햇양파 및 양파 절임김치를 식단으로 제공하기, 양파 한 망 더 먹기 등 캠페인 동참을 호소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의 수급안정 사업과 병행해 판로 확대 등 가격안정과 소비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일제 전쟁유적, 교육 자료 활용해야"

일제전쟁유적네트워크, 광주 토론회서 주장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주·전남을 비롯한 한반도 전역의 일제 전쟁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12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식민지 역사의 기억 계승 방안'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정혜경 일제전쟁유적네트워크 대표는 "한반도 내 일제 전쟁유적을 보존하고 반전평화교육 현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한반도 내 아시아태평양전쟁유적(일제전쟁유적)은 지난해 기준 8953곳이다. 정 대표는 각 유적을 군사유적(군부대 등), 생산관계유적(공장·탄광·광산·철도·도로등), 식민통치유적(조선총독부·신사·경찰서·동양척식주식회사 등) 등으로 구분했다.

정 대표는 해방 후 혼란기에 각 유적들이 개인 자산으로 둔갑해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태만 남고 그곳이 담고 있던 행위와 감성의 흔적은 사라지는 것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또 국토부, 지자체 등 정부기관마저 유적의 역사와 기능을 외면하고 문화적 재생이 아닌 물적 개발을 추진하면서 많은 유적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내놨다.

여수의 해안동굴을 비롯해 대구, 남해 등 군사유적은 대부분 방치되고 있고, 서울 영등포 가네보 공장은 이미 개발로 사라졌으며 인천 육군조병창 병원건물은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철거됐다는 것이 정 대표 설명이다.

정 대표는 도시 재생, 공간 재활용, 지속가능성, 경제활성화, 기억공간 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보존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반전평화교육의 살아있는 현장, 피해자성을 공유, 공간의 스토리텔링 강화 등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 정부 및 지자체 중심에서 벗어나 전문가와 시민, 조례 등으로 보존 작업을 추진해야 하며, 전수조사, 자료수집, 구술기록·사진·영상 생산 등을 통해 유적의 역사를 기록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등록문화재 제도나 건축자산제도를 적용해 보존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 대표는 "일제전쟁유적은 비록 일본이 침략 전쟁 수행을 위해 만들었으나 엄연히 한반도의 유적이며, 우리 땅과 민중이 경험한 우리의 역사"라며 "일제전쟁유적이 사라진다는 것은 유적에 깃든 기억과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며 그 곳에 동원됐던 경험자들의 기억과 역사도 사라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